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이동훈, 서기관 이경수 (044-200-2056, 2057)
	적극행정 추진방안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과장 이한형, 사무관 김월중 (044-200-2432, 2431)
		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	담당관 정의탁, 부감사관 이소윤 (02-2011-2736, 3648)
		법무부 국가송무과	과장 김지완, 사무관 박건우 (02-2110-3202, 3521)
		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	담당관 여중협, 사무관 조성덕 (044-205-1481, 1488)
		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	단장 이대건, 팀장 박재현 (02-730-2464, 2410)
		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	과장 김남두, 서기관 이해정 (044-200-7131, 7145)
		인사혁신처 복무과	과장 안 석, 사무관 한송화 (044-201-8440, 8435)
		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	과장 최성희, 사무관 염철승 (044-200-6765, 6565)
	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과장 강경택, 서기관 윤제민 (044-200-2216, 2214)

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, 소극행정 엄정조치

-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
- 법제도 개선,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·동참·실천 유도

<적극행정 추진방안>

- ▶ 민간주도 기초지자체 ‘적극행정 노력도’ 평가, ‘적극행정지도’ 작성·공개
- ▶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·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
- ▶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(소극행정 신문고) 설치,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

<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>

- ▶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적극행정 추진방안」과 「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을 심의했습니다.

* (참석) 기재부·과기정통부·고용부·중기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 금융위·권익위 위원장, 교육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안부·산업부·복지부·국토부 차관, 인사처·법제처장, 감사원 사무총장, 통계청장, 중기음부즈만 등

◆ 적극행정 추진방안 (관계부처 합동)

□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, 실천 유도를 위한 '적극행정 추진방안'을 논의했습니다.

□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

-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
-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,
-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,
-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.

□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*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* ① 기관장 역할·책임 강화, ② 적극행정 면책·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,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

①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.

○ (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·공개)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'기업체감도 평가*'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,

- 그 결과를 바탕으로 (가칭)적극행정지도를 작성·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.

* (대한상의)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,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(연1회)

- (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)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「적극행정 실행 계획」을 의무 수립하고,
 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령)」을 제정('19.8)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.

②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,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.

- (적극행정 면책제도* 보완)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,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「현장면책창구」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*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·감경해주는 제도

- (사전컨설팅 보완·확대)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* 도입('18.12)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,

-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「현장 원-스톱 컨설팅 창구**」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
*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

** 현재 규제담당부서 → 시·군·구 감사부서(경유) → 시·도 감사부서 → 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

- 아울러,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*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

*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

- (개인의 책임부담 완화)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,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- 또한, 「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」 제도를 신설하여,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.
- (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)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·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'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'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.

③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.

- (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)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「(가칭)소극행정 신문고」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,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·처리토록 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- (민원처리 피드백 강화)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, 제안,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,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(단속)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점검결과 악성·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.
-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.

- (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) 정책수요자인 국민·협회·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,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.

*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(행안부),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(인사처) 등에 활용

- (소통 강화)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(「(가칭)적극행정 메아리」)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,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.
-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, 행안부,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(19.3~5월)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·확산하여,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
-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하고, 전파·확산해 나가겠습니다.

◆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(산업통상자원부)

-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-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.
-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- 이에,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.
-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‘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.

① (가칭) 지자체 적극행정 지도 작성 · 공개

(가칭) ‘지자체 적극행정 지도’ 작성을 위해 기관별 노력도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가?

⇒ '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,000여 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행정 행태, 공무원의 태도,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 ‘적극행정 노력도’를 주관적 설문으로 조사하여 전체를 5개 평가 등급(S-A-B-C-D)으로 구분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

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가?

⇒ 2019년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임

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비교 평가·공개

□ 목적

- 정책수요자인 지역기업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주관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*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자체 간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및 기업체감도 향상

* (가칭)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지도

□ 주요내용

- (평가대상) 전국 228개 지자체(226개 시·군·구, 세종, 제주)
- (조사대상) 전국 8,000여개 기업(전문조사업체 조사)
- (조사기간) 2019년 8월~11월
- (조사내용) 지자체 규제행정 행태, 공무원의 태도,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측정·평가
 - * '1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을 평가하여 지자체별 순위와 등급 등 「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」를 발표
- (결과활용) 언론 공표 및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,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인증수여식 개최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대한상의 기업체감도 조사에 '적극행정 노력도' 설문문항 협의('19.3~7월)
- 전국 기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조사 실시('19.8~11월)
- 평가 결과 언론공표 및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('19.12월/'20.1월)

②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

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며,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?

⇒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전국양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대상 '적극행정 경진대회'를 개최하는 한편,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반기마다 발굴하도록 할 계획임.

-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달성한 성과 수준과 개인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*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할 계획임.

* 적극행정 특별승진·승급, 근속승진기간 단축, 성과급 최상위 등급, 가점 등

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

□ 과제개요
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

□ 주요내용

- 우수공무원에 대해 「적극행정 특별승진·승급」, 근속승진기간 단축, 성과급 최상위 등급,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

□ 세부 추진계획

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정 : ~8월

3 소극행정 전용 신고센터 신설

‘소극행정 신고센터’에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?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?

⇒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전용창구로 신설될 예정임

⇒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3월 중에 개통하여 운영할 예정임

신설되는 ‘소극행정 신고센터’는 기존의 국민 신문고의 처리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? 처리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는지?

⇒ 지금까지 국민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더라도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대체로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였지만,

⇒ 이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먼저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,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구축할 예정임

* 단,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였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 등에서 처리

「소극행정 신고센터」 설치 · 운영

□ 개요

-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다각적 노력 필요
-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쉽게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하고, 소극행정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‘국민신문고’에 신고 센터 운영

□ 주요내용

- (신고센터 의의)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·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,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 마련
- (신고 대상) 소극행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

※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사례와 기관별 적극행정 사례를 함께 게시하여 공직 사회에 공유·확산

- (처리 기관) 신고인이 지정한 소관기관(감사부서)에서 직접 처리하고,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
- (신고센터 설치 위치)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초기화면(온라인)

□ 향후 추진일정

-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‘소극행정 신고센터’ 개설(19. 3월중)

4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도입

「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」는 어떤 제도이며,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?

⇒ 「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」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,

-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임.

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실시

□ 과제개요

-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추천 창구 마련

□ 주요내용

- 「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」 실시
 -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정책수요자인 국민·협회·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
 - * 부처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 「적극행정 추진지침」 등에 반영
 -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,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 등 국민추천사례 적극 활용

<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(안) >

추천인	추천대상	추천 방식	추천 활용
·국민 ·기업 ·협회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	·적극적·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,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	·각 부처 홈페이지 「적극행정코너」 (개설예정) 등 통한 온라인 추천	·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

□ 세부 추진계획

- '19년도 「적극행정 추진지침」 마련·배포 : ~6월